

광역경제권 호남 제외 발표 배경·전망

호남권 사업참여 유도 '압박 카드'

정부가 21일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핵심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조기 확정 발표한 것은 '5+2 광역경제권' 재조정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도 등 호남권의 사업참여를 '압박'하는 카드로 해석된다.

특히 영·호남간 산업·경제 격차를 심화하는 '5+2 광역경제권'의 본격 추진을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전국을 7개 경제권으로 나눈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호남에 1개 권역(호남권), 영남에 2개 권역(영남권·대경권)을 두고 있어 편중지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표 배경=광역경제권에서 '호남권'으로 편성된 광주와 전남도 등은 '5+2 광역경제권' 재편을 촉구

하며 줄기차게 선도사업 계획서 제출을 거부해왔다.

시·도는 호남에 1개 권역,영남에는 2개 권역을 편성한 '5+2 경제권 사업'이 호남권의 소외를 가중하고 영·호남간 산업 격차를 심화하는 심각한 권·대경권을 두고 있어 편중지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표 배경=광역경제권에서 '호남권'으로 편성된 광주와 전남도 등은 '5+2 광역경제권' 재편을 촉구

영·호남 격차 심화 '5+2정책' 추진 기정 사실화

광주시·전남도 "재편없이 참여 못한다" 강경 입장

광주시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격화되자 정부에서는 한 때 신재민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나서 시·도에 선도산업 참여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5+2 광역경제권 재편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명확히 하자, 선도산업에서 일단 호남을 배제할 강경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광역경제권 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민주당 등의 반발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자칫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국회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광주시·전남도의 대응=시·도는 "5+2 광역경제권 재편이 없을 경우 선도사업 참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김영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의 선도산업 확정 발표가 광주시와 전남도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5+2 광역경제권 재편 후 사업에 참여한다는 광주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선도산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가 "호남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조속히 사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광주·전남도의 사업 참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가사업에서 특정 지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아직 광역경제권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화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5+2 권역 재조정 뿐이다"고 주장했다.

시·도는 광역경제권 재편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5+2 광역경제권'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간 대립구도를 벗어나 국가적인 논란이 된 만큼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지자체 감사결과 공개 논란

전남지역 22개 시·군 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시장·군수협의회'가 전남도 본청의 일선 시·군 감사결과 공개에 반발,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감사결과 공개의 기준과 수위를 조절해 주도록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전남도와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주홍 강진군수·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0일 장성에서 모임을 갖고, '일선 시·

해왔으나, 감사결과 공개에 반발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주홍 군수는 "일부 시·군에서 전남도의 감사결과 공개가 무원칙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발표 수위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언론의 보도가 선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군수협 "기준 없고 선정적"

도 "일상적 업무... 재검토 할 수도"

군에 대한 전남도의 감사결과 공개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무리하게, 선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자체 기구를 통해 타지역 시·도의 감사결과 공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감사결과 공개의 기준을 정하고 발표의 수위를 개선토록 전남도에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들은, 시·군의회와 감사원 그리고 중앙정부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전남도 본청이 또다시 감사를 하는 것은 '육상육'이라고 반발을

황 군수는 이어 "감사결과를 공개하려면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발표 수위도 조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광주와 전북, 경남의 감사결과 공개 사례를 검토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전남도에 감사결과 공개의 기준과 수위를 개선토록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또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소한 일이 '침소봉대' 되는 경우를 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일상적인 업무인데다,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없어 곤혹스럽다"면서 "시장·군수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부가 21일 호남권을 배제한 채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발표하자 광주, 전남도, 지역 정치권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조례 제정 '우수'·견제 감시 '미달'

■ 광주시의회 종료... 올 활동 결산

광주시의회가 지난 19일 제 175회 정례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의회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반면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의 역할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여전히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시의회는 올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을 처리했다. 이같은 조례 발의 건수는 타 지방의회를 압도한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만 1.16건으로, 이는 전국 평균(0.34건)의 3배가 넘는다.

시의회는 여기에 '광역경제권사업 철회촉구 결의안',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 규탄 결의안' 등 각종 건의안과 동의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215건에 이르는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광주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

정규직인', '광주시의회 의원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은 투명하고 시민 지향적인 의정 활동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 경제권 사업,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나서 시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우수한 의정 활동에 대한 수상도 잇따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역발전부문 연속 수상을 비롯,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

단체부문 우수상 연속 수상, 개인부문 장려상(나종천 의원), 장애인 정책 최우수 의회 및 우수의원(이명자·송재선 의원) 선정 등으로 상복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 의원이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거나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의원들의 '제 밭그릇 쟁기'식 추대 등으로 인한 자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또 시정질의를 비롯,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광주시 행정과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목청만 높였을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할 기색 심사에 그쳐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AFA VERVE CHAIR

SAFA MACHINE

제품문의 1688-1471

"효문화전당 공사 즉각 재개를"

광주 시민·사회단체 촉구 결의대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대표 회장 방철호)은 22일 오후 3시 옛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진행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의 장기화로 공사가 중단된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의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생 방안 마련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도청원형보존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측에 주문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광주 지역 자치단체장, 광주시의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관계자는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사에 더 이상 차질이 빚어져서 안된다는 데 회원단체들이 뜻을 같이해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사는 지난 6월 불거진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의 장기화로 지난달 말부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